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2025. 2.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 1

1.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 3

2.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 5

Ⅱ.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 ····· 9

1.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 11

1) 공정채용 시스템 공고화 ····· 11

2) 2030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착 ····· 13

3) 지방 현장의 투명성 증진 ····· 15

4)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형 반부패 정책 추진 ···· 18

2.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 19

1) 공직사회 반부패 행위규범의 실효적 정착 ····· 19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차단 노력 확대 ····· 24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강화 ····· 27

4) 실효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 31

순 서

3.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32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내실화 ····· 32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청렴교육 ····· 35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 41

4) 기관간 협력을 통한 이첩·송부 사건의 신속 처리 ····· 43

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44

Ⅲ.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47

1. 한국수력원자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4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54

[참고자료] ····· 57

1.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 59

2. ’25년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 일정 ····· 60

3. ’25년 청렴연수원 운영 이러닝 과정별 주요내용 ····· 62

[붙 임] ····· 63

Ⅰ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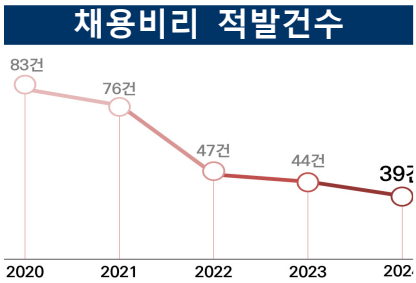
[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 반부패 정책 내실화로 청렴·공정 기반 강화

○ **(공정채용 기반 조성)** 공직유관단체 실태조사로 **불공정 채용실태를 개선**하고,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정 채용기준 마련을 권고**('24.9월)해 **자의적 채용 방지**

*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 ('20) 83건 → ('21년) 76건 → ('22) 47건 → ('23) 44건 → ('24) 39건



○ **(공직자 행위규범 개선)** 현장 의견 반영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절차를 합리화***하고,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3만원→5만원)해 **규범 이행력 제고**

* 학술·연구활동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제도 합리화 등 반영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8.14.)

○ **(보호·지원 기반 강화)** 법령·지침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대상·범위** 등 **확대**

❶ **(법령 개정)** ①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근거 신설, ②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30억→폐지), ③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471→495개) 등

❷ **(지침 개정)** ①구조금 지원 확대, ②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등

□ 부패요인 제거로 지방현장의 부패 관행 해소

○ **(부패 취약분야 점검)** 신고사건 및 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현장의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❶ **(상수도관)** 48개 지자체에서 상수도관에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한 사실 확인하고, 소관 기관에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 통지

❷ **(위험근무수당)** 12개 지자체에서 위험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험근무수당이 부적정 지급된 940명(62천만원)을 적발**해 전체 기초지자체에 위반사례 공유

❸ **(지방의회 국외출장)**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유성 일정 편성, 결과보고서 허위작성** 등 사항을 적발해 엄정 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공직자 행위규범 이행 점검)**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을 위반한 **부적정 수의계약, 부당 업무추진비 집행 등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불공정 관행 해소

❶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및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및 의원 배우자 등과** 총 1,391건, **약 31억 939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

❷ **(행동강령)**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약 18억), 과도한 의정연수, 계획되지 않은 단체 견학 등 **부적정 예산집행**(약 1.9억원) 등

○ **(자치법규 부패요인 제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 부패·불공정 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권고**로 부패요인 예방적 제거

※ 86개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회·집행기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27개 개선과제** 발굴, **총 3,162건 개선 권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 주요 사례】

-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특별전형 문구 삭제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제한기준 정비,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선정·운영 공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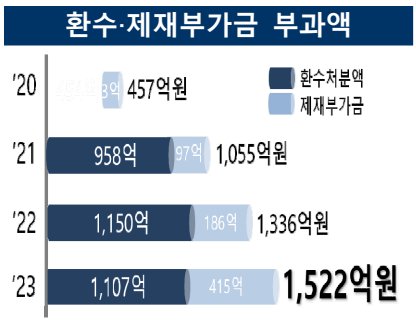
□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청렴정책 추진

○ **(청렴도 향상 지원)** 종합청렴도평가 대상기관 확대(718개)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기관 유형별 워크숍을 확대·실시**하고, **청렴컨설팅*으로 심층 진단·분석 지원**

※ 청렴컨설팅 효과 : '24년 24개 멘티기관 중 **18개 기관(75%) 청렴도 상승**, 그중 4개 기관은 우수등급(1~2등급)으로 개선, **심층·진단분석** 대상 기관(5개) 중 **80% 청렴도 상승**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 중앙부처·지자체 등 308개 기관의 부정수급 적발·제재 **정기점검,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각급 기관 후속조치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환수제재 부가금액 : ('20년) 457억 → ('21년) 1,056억 → ('22년) 1,336억→ **('23년) 1,522억**



○ **(부패방지교육 참여 확대)** 교육 이수율 저조 기관 **컨설팅·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등 지원, **공직세대별·분야별 맞춤형 청렴연수원 교육**으로 **교육 이수율 제고**

※ 전체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이수율 : ('21) 95.0% → ('22) 95.6% → **('23) 96.1%**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이수율 : ('21) 87.3% →('22) 92.2% → **('23) 96.3%**

2 2025년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여건

□ 우리나라 청렴성 국내·외 인식 개선 필요

○ **(주요 국제지수)** IMD·WEF·PERC 등 **반부패 관련 국가별 인식과 수준**을 나타내는 **다수 지표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줌

[2024 반부패 관련 지수 평가 결과]

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뇌물공여·부패비리'** 항목

	점수	순위	대상국
2023년	4.66점	32위	64개국
2024년	**5.23점**	**27위**	67개국
변동 폭	**0.57점 상승**	**5단계 상승**	

②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공적자금 유용 정도(점수)	**뇌물 및 추가 비용 제공 정도**(점수)	대상국
2023년	4.03점	4.99점	109개국
2024년	**4.15점**	**5.02점**	109개국
변동 폭	**0.12점 상승**	**0.03점 상승**	

③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 중 **'정치경제위험도'** 항목

	점수	**순위**	대상국
2023년	6.05점	8위	16개국
2024년	**5.51점**	**7위**	16개국
변동 폭	**0.54점 상승**	**1단계 상승**	

- 다만, **국가청렴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5.2월)는 **점진적 개선 추세**에 있으나, 한국의 **경제적 역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16년) 53점, 52위 → ('18년) 57점, 45위 → ('20년) 61점, 33위 → ('22년) 63점, 31위 → **('24년) 64점, 30위**

*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 12위**, **1인당 GDP**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위**(한국은행, 2024.6월)

○ **(국민 인식)** '우가 사회가 부패하다'는 **국민 인식은 높은 수준을 유지**(57.1%, '24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부패인식과 큰 차이**(44.3%p)를 보임

※ 2024 부패인식도조사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 인식 현황(국민권익위원회, 2025.1월)

· 일반국민 : ('22년) 54.4% → ('23년) 56.5% → **('24년) 57.1%**

· 공무원 : ('22년) 8.0% → ('23년) 7.9% → **('24년) 12.8%**

□ 미래세대가 공감하는 공정·청렴문화 조성 필요

○ **(공직환경의 변화)**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세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연고주의·정실주의 등 불공정·부패 관행**은 **미래세대 조직몰입을 저해**

※ MZ세대(20~30대)는 조직 내 승진 및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조직 냉소주의 경향이 낮아짐(한국행정논집, 2024.6월)

○ **(부패개념의 확장)**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 수수 등 **전통적 부패 경험은 감소**했으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은 여전히 높음**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전국 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 대상 조사)

· **(금품·향응 제공 경험)**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 연평균 **2.8%**(2010~2017) → **0%**(2020) → **1.6%**(2023)

· **(부패인식)**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 **59.9%**(2010~2017) →**49.8%**(2020) → **45.8%**(2023)

- **소극행정, 권한을 남용한 재량의 일탈·남용** 등까지 공직자의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에 대한 대비 필요

※ 사업체 종사자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정부패로 인식**(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2020)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자금세탁, 비자금, **이해충돌, 족벌주의, 후견주의, 회전문 인사** 등 새로운 부패유형 및 **국가포획·영향력 행사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된 부패를 **제3의 부패유형으로 규정**(국제투명성기구, 2012)

- 법령상 **'직무관련성'**은 직접적 관련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까지**, **'이익'**은 금전적 이익 외에 **비금전적,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해 규율

* 공무원은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됨(「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3항)

○ **(공정성 인식 차이)** **사회 불공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전년에 비해 높아지고, 공무원의 경우,** 우리 사회의 **부패보다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음**

※ 2024 부패인식도조사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인식 현황(국민권익위원회, 2025.1월)

· 일반국민 : ('23년) 49.5% → **('24년) 51.8%** / 공무원 : ('23년) 19.9% → **('24년) 21.8%**

□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필요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세계 각국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ESG 및 반부패 글로벌 규범 증가에 대응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ESG 경영 확대** 추세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부패 관련 민간부문 파트너십 현황】

- **(미국)** 미 국무부는 OECD 관계자, 시민사회, 아마존, 테슬라 등 50여명의 민간 기업인으로 구성된 **반부패 리더 허브를 형성**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를 개발**해 제공함
- **(프랑스)** 프랑스 반부패청은 기업의 부패방지 조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 행동강령, 내부고발자 제도 구축 등을 장려**하고, 부패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 개발
- **(홍콩)** 홍콩 염정공서(ICAC)는 홍콩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기업윤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업종별 맞춤형 윤리프로그램 지원, **'기업윤리 건강체크리스트 제공'**으로 자체 평가 지원

○ **(디지털 기술 활용)** 불법 자금의 초국적 유출, 자금 은닉 방법의 정교화 등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디지털 기술 활용 부패탐지·예방 활동**에 **협력 필요성 강조**

※ OECD 아·태지역 반부패회의('24.3.) : 부패는 개발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역량을 증가시켜 부패위험 식별, 평가, 공개, 모니터링 등 절차의 효과성 제고 필요

※ World Bank('23.6.), OECD 반부패 포럼('24.3.) : 각국의 부패위험을 평가하는 기술 역량과 데이터 기반 전략 개발 촉구

【부패 관련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국제]

- **(EU)** DIGIWHIST의 OpenTender.eu는 EU 국가들의 공공 계약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패 위험지표**(transparency, integrity risks 등)를 **식별**하여 공개
- **(미국) 보건의료 부패 예방**을 위해 Medicare 서비스 관련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 패턴 분석,** 데이터 변칙의 탐지, 체계화되지 않은 데이터셋 유형화로 부패 식별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반부패기관(IACA)은 **생성형 AI**(GPT) 기술을 도입해 **부정·사기 관련 문서 분석**, 패턴 인식, 예측 등을 통해 조사 및 감사에 활용

[국내]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의심사례 적발
- **(한전, 발전5사) IT 기반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이상징후 자동 파악

국민이 체감하고 미래세대가 공감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선도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Ⅱ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제

[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1 공정채용 시스템 공고화

◇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적발**과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예방**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신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은 광역체육회(17개) 등에 대한 위원회 직접 조사 예정

□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 **(전수조사)**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4년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2~10월)

- **(대상) 필수조사*** **617개** 기관 및 **재량조사**** **806개** 기관

* 기재부·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4년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방법) 감독기관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실시

* 위원회는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은 체육단체 중 **광역체육회**(17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중 **'징계' 이상 적발 기관**(7개) 등에 대해 **직접 조사 예정**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 수사 의뢰 즉시 업무 배제,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조치

**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 '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례 】

- 내부규정상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서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층면접 이후 임원면접 전형을 신설하기 위해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고, 임원면접을 원장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의결
- 당연직 이사, 당연직 감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험위원을 제척하지 않음
- 응시지원서 상 응시자가 기재한 경력사항과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이 상이함에도 경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여 합격자가 바뀜

□ 공정채용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컨설팅)**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채용 규정의 **'공정채용 법령·지침' 위반·누락** 여부를 진단하여 **개정 유도**

※ '25년에는 전년도에 제도개선 권고한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착 방안' 과제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기타공직유관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컨설팅 예정

* 기타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

○ **(전문교육)**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채용비리 예방**

- **(대상) 공직유관단체**('25년 상반기 기준 1,490개) 소속 **인사·감사담당자**
- **(내용)** 채용단계별 **관련 규정**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적발 **사례, 질의응답**
- **(일정) 집합·화상**교육 과정(2시간) **총 8회** 운영 예정

* 집합·화상교육과는 별도로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lms.acrc.go.kr) 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중

[협조 요청 사항]

○ '25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전체기관)

- 감독기관 조사·위원회 주관 조사 시 **적극 협조**, 전수조사 **후속 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철저

○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을 위한 **자료제출** 및 개정권고안 이행 협조 (기타공직유관단체)

○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참여** 협조(전체기관)

○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현지점검** 등 **적극 협조** (해당기관)

- 신고사건이 송부될 경우,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2 2030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착

◇ **공직사회 내 관행화된 부패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

<신규>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새로운 행위기준 마련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을 통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방안 마련

○ **(집중신고)**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 주요 신고 유형 】

· (직무상 갑질) 시의원이 직무관련자인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단체 바자회 티켓 강매

·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지외출장, 초과근무를 본인이 결재하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수차례 부정 수령

○ **(기준 신설)**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 위한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기준 마련** 신규추진

-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의견** 및 **전문가, 각급 기관 의견을 수렴**해 행동강령상 **합리적·객관적 기준 신설**

* 하급 직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행안부·인사혁신처, '24.11.), 중앙행정기관 6,570명(응답자의 10.1%), 지방자치단체 21,386명(23.9%)가 최근 1년 이내 경험

□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통한 관행화된 부패요인 제거

○ **교육현장, 지방 공사·공단** 등 대상 **직무상 갑질, 부적정 예산사용 등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통해 관행화된 부패요인 제거

* (점검 사항) 직무상 갑질, 상품권 관리 부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 부패 **취약시기 집중점검**(정기),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사항 점검**(수시) 실시 및 **유사사례 전파**를 통한 재발 방지

[협조 요청 사항]

○ 위원회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후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이행점검 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필요 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3 지방 현장의 투명성 증진

◇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 이행** 및 **자치법규 부패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지방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확대> 17개 광역시·도의회, 69개 자치구의회 대상 자치법규 개선과제 추가 평가 실시

□ 지방의회 국외출장 부적정 관행 개선

○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전수 점검 결과**('24.12.16.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으로 부적절한 **국외 출장 관행 개선**

- 점검 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은 **수사의뢰**, 감사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감사 등 조치 요구**(2월)

* (지방자치단체) ① 체재비(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일비, 식비, 숙박비) 과지급, ② 주류 등 부적정 물품 구입 등 금전 지출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출장 심사 등 의회 사무와 관련된 사항

※ 항공료 조작 사항의 경우, 수사기관 판단 이후 환수 필요시 해당 기관에 조치 요구

- 근원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제고개선 권고**(1월)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추진**

【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 243개 지방의회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전수조사를 통해 항공료 조작, 체재비 과다 지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비용청구 등 위반사실 확인

□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부당 집행 개선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점검 결과**('24.6.4.)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으로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

- 위험근무수당 **부당 집행 기관에 환수 등 조치를 요구**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
- '24년 점검 미실시 기관인 **23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자체 조사**('24.7월~) 및 **점검결과 확인**을 통해 예산 낭비 관행 개선

【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실태조사 결과】

· 12개 지자체 대상 위험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조사 결과, 위험직무 직접종사·상시종사 미해당자 총 940명에게 6억2천만원 부당집행 사실 확인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요인 사전 제거

○ 3개년('22~'24) 자치법규 순차 평가에 따라 **'22년, '23년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지 못한 신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추가 평가 실시

* (예) '24년도에 신규 발굴하여 86개 지방의회에 권고한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차단' 개선권고는 '22년 79개, '23년 78개 지자체에는 미 권고

【'25년 지방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 (대상) 17개 광역시·도의회 및 69개 자치구의회 소관 자치법규

※ 조례·규칙·훈령·예규 외에 내부지침 등도 필요시 평가대상에 포함

· (일정) 17개 광역시·도의회, 69개 자치구의회 순으로 상·하반기 평가

· (방식) 연도별·지자체별 순차 평가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한 개선과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자체**('22년~'23년) 자치법규 대상으로 **추가 평가 실시**

※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등

○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이행 조치기한 도과 기관** 대상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저조한 기관 대상 **컨설팅 추진**

< 개선권고 조치기한 및 이행점검 일정 >

권고년도	'22년	'23년		'24년	
평가기관	79개 시·군·자치구	17개 광역 시·도	61개 자치구	86개 지방의회	86개 시·군
조치기한	'23.6월	'24.3월	'24.8월	'25.2월	'25.8월
이행점검	'25. 상반기	'25. 상반기	'25. 하반기	'25.3월	'25.9월

※ '22년, '23년 평가기관 중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 '24년 평가기관은 이행실적 제출로 이행점검 갈음

[협조 요청 사항]

< 지방의회 국외출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후속조치

- (지자체 감사기구) 감사사항 통보에 관한 조치 및 관련 사항 위원회에 통보
- (지방의회) ① 의회 내 사무 관련 사항 통보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② 행정안전부 의회규칙표준안 개선 권고('25.1.14.)에 대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부당집행 개선 >

○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24년도에 위험근무수당 자체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빠른시일 내에 제출요망(제출기한: 1차 '24.12.31., 2차 '25.2.7.)

< 자치법규 부패요인 사전 제거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17개 광역시·도의회 및 69개 자치구의회)

- 내부지침, 매뉴얼, 방침서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
- 개선권고안 의견조회시, 개선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내 회신

○ 기 권고 사항 이행 협조

- '22년, '23년 평가기관 중 개선권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조속히 이행(79개 기초 시·군·구, 78개 광역시·도 및 자치구)
- '24년 평가기관은 위원회에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 및 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 이행실적 제출 (86개 시·군)

4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형 반부패 정책 추진 신규추진

◇ 빅데이터·AI 기술을 반부패 정책의 지능화·고도화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반부패 정책의 지능적 운영

○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부패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를 **사전에 탐지·예측**하는 등 **지능적·효과적 반부패 정책 추진** 방안 마련

- **(챗봇 활용) 부패신고 상담**에 챗봇 형태의 **대화형 인공지능** (Conversational AI)* 도입으로 **맞춤형 답변의 신속한 제공**

  *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신경망 기술(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으로 자연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 **(GPT 활용)**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활용한 반부패 법령 관련 **유권해석 질의·답변**으로 **법령 해석의 일관성·정합성 제고**

  *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고 트랜스포머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 Open AI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거대언어모델(LLM)

□ 범정부 부패방지 데이터 활용 반부패 정책의 질적 향상

○ 실제 국내·외에서 구현되고 있는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반부패 정책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 모색**

- 반부패 관련 **데이터의 수집·활용** 방안 및 범위 모색, **근거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25.3월~)

  * 신고자 보호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방안, 가상자산·전자바우처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 연구

[협조 요청 사항]

○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반부패 정책 추진 사례가 있는 기관은 구체적 추진 방법, 현황, 효과 등 관련 사항 공유 협조(해당 공공기관)

※ 사례 연구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 방문 추진 예정

2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1 공직사회 반부패 행위규범의 실효적 정착

◇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개정 추진,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 등으로 공직사회 내 **반부패 행위규범의 실효적 정착** 유도

<신규>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거래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등

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반부패 행위규범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 법·제도 운영에 따른 시사점,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안** 관련 **법 개정 추진** 신규추진

※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상반기)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개정 필요사항(안) 】

- **(사적이해관계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공직 생활 내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이를 **'최근 ○년 이내'**로 개정
- **(징계·과태료)** 경미한 경우 등에는 제재수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징계등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
- **(위반행위 신고 처리)**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개정

○ **(행동강령)**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동일하게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명시 신규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삭제 등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필요사항 관리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행위기준 개정 필요사항】

- **(음식물 수수 가액)** 예외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향(3만원→5만원)
- **(선물 수수 가액)** 예외적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금액상품권 제외)
-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항 삭제

② 반부패 행위규범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 **(실태조사)** 각급 기관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

· **(청탁금지법)** 각급 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 등 점검·분석** 및 시정조치 실시, **점검 결과 대국민 공유**로 유사 행위 예방

※ 서면·현지점검(~5월), 부적절 처리사례 등 통보·시정조치 요구(~6월), 결과 발표(7월)

【 '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적절 처리 시정조치 사례 】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골프장 예약편의, 이용료 감면 등 1인당 약 11~57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수수자 외에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음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제공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회식비 약 2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은 수수자, 제공자,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음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수수자, 제공자 및 소속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9~12월)

○ **(취약분야 점검)** 이해충돌방지법 취약분야(지방의회) **점검결과**('24.12.)* **이행관리** 및 위반사례 빈발 **취약분야**** 제도 운영실태 **집중 서면·현장 점검**(연중)

* 20개 지방의회(광역 7, 기초 13) 대상 부적정 수의계약 등 2,318건 법 위반 의혹 확인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24.12월) → 기관 조사·조치 중

** 전년도 全 공공기관 실태조사 분석 결과(~2월 예정) 등 활용 점검대상 선정

○ **(간담회·컨설팅)** 지방의회, 교육·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기관별 특성 고려** 이해충돌방지법 **간담회·컨설팅 실시** 및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 신규추진

【 기관별 이해충돌 사례(예시)】

- **(지방의회)** 지방의원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원 본인 관련 안건을 신고·회피없이 심의
- **(교육·연구기관)** 지분 보유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연구행정 인력으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
- **(공공금융기관)** 상급자, 퇴직자 등에 대한 계약·대출 심사,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

○ **(유권해석·신고처리)** 각급 기관의 반부패 행위규범 **해석·적용 관련 문의** 및 **법 위반행위 신고의 신속·공정한 처리**(연중)

※ 쟁점사항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 운영

③ 반부패 행위규범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교육) 공직자의 법 이해도·민감도**를 **향상**시켜 자연스러운 이행 유도

· **(청탁금지법) 청탁방지담당관** 등 대상 법령 개정사항, 처벌 사례, 주요 해석례 등 설명으로 **역량 강화 및 자체 교육 활성화**

※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사·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설명회(상반기) 등

· **(이해충돌방지법) 기관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직접교육***(연중)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주요 유의사항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9월)

* 각 기관에서 필요시 위원회에 강의 관련 지원 요청 가능

· **(행동강령)** '25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지원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기반 조속 구축**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역량 강화

○ **(홍보) 공직자·국민의 법 인식도 향상**을 위해 법 주요내용 홍보 전개

· **(청탁금지법)**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 배포, **사회적 현안 관련 해석기**준 SNS, 카드뉴스 등 전파

* 학교 입학·졸업, 스승의 날, 설·추석 명절기간, 연말·연시 등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쉬운 이해와 적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개

① 행위기준에 대한 손쉬운 자가 점검을 위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작·배포(5월)*

* QR코드를 인식하는 경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관련 웹페이지로 연결, QR코드가 인쇄된 마그넷, 포스터 등 홍보물품 제작 병행

② **취약분야 관련 주요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위원회 블로그 등에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배포(분기별)

③ 법 시행 3주년 기념 국민참여 공모전 이벤트, 기획기사 등 대국민 홍보 실시(5월) 및 **이해충돌방지법 웹드라마**(숏폼)* 제작(~11월)

* 수요조사를 통해 '25년 나라배움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상으로 선정

④ 행위기준 관련 해석·적용 기준을 반영한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월)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 점검 자료 제출(2~3월) 및 현지 방문 점검 협조(4~5월)
-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협조(하반기)

○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교육)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상반기)
- (홍보) 설·추석 명절, 학교 입학·졸업, 스승의 날 등 주요 시기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배포 및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 협조(수시)

< 이해충돌방지법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별 제도운영 현황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9~12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협조**(해당 기관)

- '24년 지방의회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위반 사실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조치 완료** 후, 위원회에 **결과 제출**(~2월)
- '25년 취약분야 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서면·현장조사 협조**(상반기)

○ 공직자의 **수범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수시 배포되는 제도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 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해당 기관)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위원회에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3조)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지원 요청**

○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교육·안내를 위한 제도 설명회 참여(9월 예정)

○ 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 >

○ 행동강령 개정사항은 **기관별 행동강령에 조속히 반영**(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위원회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청렴포털 자료입력**(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장은 반기별로 기관별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자료를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제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0조

- 특히,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4년 하반기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입력기간 : ~ '25. 3. 13.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차단 노력 확대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 각급기관의 **환수 역량 강화** 지원, 빈발 분야 **신고 활성화** 등으로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

<확대> 현지점검 대상기관 확대(16개), 부정수급 빈발분야 집중신고기간 확대(4회) 운영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처분 점검 강화

○ **(이행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309개) 대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반기별)

-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안내**

【'24년 이행실태 점검 및 후속점검 결과】

- **이행실태 점검**
  - '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재조치 905억 원**(환수처분 690억 원 + 제재부가금 부과 215억 원)
  - '24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제재조치 648억 원**(환수처분 540억 원 + 제재부가금 부과 108억 원)

※ 세부 점검결과(연도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예산대비 환수처분 비율,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등)는 청렴포털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후속점검**
  - '24.6월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바우처)' 분야 점검 시 **제재부가금 미부과한 64개 기관에 제재부가금 부과 권고**(총 222억)

- **'25년 현지점검 대상기관을 확대**(16개, 3월·8월 확정·통보 예정)하여 제도 운영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우수사례 수집·전파** 추진 확대

□ 각급 기관 환수·제재 처분 이행 관련 교육 확대

○ **(교육 활성화)** 각급 기관 **사업담당자** 및 **민간사업자 대상** 부정청구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에 대한 **교육 확대**

- **감사·사업담당자, 직역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설명**, 분야별 **신고사건 처리사례** 소개 등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진단, 신고사건 조사 및 청렴노력도 관련 **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

-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임토론, 골든벨퀴즈 등 **소통형 프로그램 위주**로 **권역별 워크숍** 진행

※ 3월 중 대상기관에 계획 통보 예정

-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담당, 직역별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제공**

※ 최신 교육자료(PDF)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게시 완료(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

□ 부정수급 빈발분야 집중신고 및 협업 홍보 추진

○ **(집중신고)**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세분화하고 **집중신고기간을 확대 운영(연중, 1회→4회)**하여 **국민 인식 제고** 및 **신고 활성화 유도** 확대

※ 집중신고기간 운영 분야 및 시기는 추후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자진신고제도를 함께 홍보**하여 적발·처분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약하고 **누수된 재정 회복에 기여**

※ 자진신고제도 : 행정청의 환수처분 등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1/2) 또는 면제

○ **(협업 홍보)** **각급 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 (부정수급 금지 및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 **홍보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적극 협조(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309개 공공기관)

※ '24년 하반기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 제출 협조(세부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현지점검 적극 협조(해당 공공기관)

※ 현지점검 대상기관 확정·통보(3월·8월 예정) 시 장소제공·자료사전준비 등 점검 협조

○ 위원회 주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참여 및 기관별 자체 교육 적극 실시(전 공공기관)

※ 교육·컨설팅·워크숍 대상기관은 추후 통보 예정

○ 각 기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집중신고기간 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집중신고기간 운영 협조 공문 발송 예정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강화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강화**, 화해권고 제도를 활용한 완전한 문제해결, **적극적인 보·포상금 지급**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강화

<신규> 반부패 5개 법률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통일을 위한 규정 전면 개편

□ 반부패 5개 법률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전면 개편 신규추진

○ **(보호·지원 수준 통일)**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최대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전면 개편**(하반기 국회 제출)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보호·보상은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별도로 규정하되 그 수준을 통일하고, 그 외 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 정부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활용(연중)

○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 강화)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 **타 신고까지 확대** 추진(하반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를 통해 **상담의뢰 방식 개선 사항** 전달 등 각급 기관 **안심변호사제도**** **운영 지원**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기관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조례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운영

○ **(사전·사후 보호 강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기 전 **신속한 사전 예방책 실시, 보호조치 후 이행점검** 및 **불이행자 엄정 제재**

사전예방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부패신고자) 불이익조치가 예정된 경우 위원장 직권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사후관리	· 보호조치 결정 후 주기적 점검(반기 2회) 실시, 필요시 수시 모니터링 · 보호조치 위반자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 **(완전한 문제해결)** 보호신청 사건에서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화해 권고' 제도***의 활용을 높여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

*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전에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최근 5년간 화해 권고 4건)

□ 신고자 보호 · 지원 제도 이행력 제고

○ **(실태조사)** '24년도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서면·현장 실태조사** 실시*(1~3월)

*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창구 설치 현황, 자체 운영규정 제정, 책임관 지정, 자체 보포상금 운영 등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신고 빈발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건 처리** 및 **선제적 예방 활동 등**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 지원**

○ **(맞춤형 교육) 공익신고 빈발분야**(도로교통법 등) 및 **신고자 보호 취약 분야**(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를 선정, **맞춤형 교육** 제공(상·하반기)

- **빈발·취약 분야별 소관기관, MOU 기관 등***에 대한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직무 특성 반영 교육자료 제작**(상반기)

* (예) 대한건설협회, 서울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 **(기획 홍보)** 신고자 보호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제별로 다양한 매체**(웹툰, 유튜브, 카드뉴스 등 온라인 중심)를 선정해 **체계적 홍보**(수시)

- 주요 신고 사례,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등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의 홍보 자료** 제작

※ 사례별 홍보 외에도 신고제도 전반의 종합 지침서로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업무 안내서」 개정·배포를 통한 이해도 향상 도모

□ 적극적인 보 · 포상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

○ **(보상금)** 새로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정립** 및 **신고접수·조사·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면밀한 보상사건 처리**

※ 보상금 결정 절차 : 해당 부서 검토(신고 및 조사결과 자료 등 확인·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 **(포상금) 상·하반기 포상 수여**로 외부 공익신고자, 타 기관 신고자, 협조자 등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보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공익신고 포상 사례 추천**을 통한 다양한 사례 발굴

※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공익증진 정도가 현저하며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적극적 지급

○ **(사후관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상환 대상 사건의 체계적 관리**

- 상환 통지 시 제도 취지 및 근거법령 안내, **미납부시 분기별 상환 촉구,** 장기·고액 상환금 연체기관 대상 **상·하반기 현지점검** 실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발생

[협조 요청 사항]

○ 위원회 주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 요청**(해당기관)

※ 공익신고 접수·처리, 자체 운영규정 제정 현황, 책임관 지정 현황, 자체 보·포상금 운영 현황, 공익신고 창구 설치 현황 등

○ 위원회 주관 공익신고 빈발분야·취약분야 소관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공문 발송 시 적극 수요 제출**(해당기관)

○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홍보 콘텐츠 주기적 공유 시 **기관별 정책고객·이해관계자·SNS 등을 통한 확산·배포 협조 요청**(해당기관)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상반기 실무자, 하반기 과장급 이상) 시 적극 참여 요청(해당기관)

○ 기관 내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화해방안 모색·협조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해당 기관)

* 신고사건 조사 및 관련 문서 내·외부 시행 등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 및 공개범위 관리 철저
**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

○ 신고자-기관 간 **소송 등 법률분쟁시, 기관측 대리인(변호사 등)**에 대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당기관)

※ 대리인의 변론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등 관련 정보 공유, 대리인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철저 등

○ 신고자 보호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불이익조치자 징계 등** 위원회의 **조치 요구사항 이행**(해당 기관)

※ 요구사항 미이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사항으로 반영됨

○ 부패·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해당기관)

※ 신고서, 조사 결과 통지서, 처분 결정일자, 실제 환수내역, 불복구제절차 진행여부, 보·포상금 지급 여부 및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자료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한준수, 현지점검 협조**(해당기관)

- 상환 통보 사건 관리 및 예산편성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상환 처리(상시)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징수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 상·하반기 상환 연체기관 현지점검 시 소관부서 연락 등 협조(해당기관)

○ **포상금 사례 추천 요청시** 사전검증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추천**(모든 기관)

※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회복, 처벌이 나왔으나 내부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 구조금 손해배상청구 대위 행사를 위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해당기관)

4 실효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 각급 공공기관 내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적 안내와 철저한 관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 제도 개요

○ **(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제한 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제한 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밀접업무 영리사기업체 등

□ 실태점검 및 위반자 제재

○ 연 2회, 반기별로 **비위면직자등 발생현황, 취업현황 조사** 및 **현지 실태점검** 등을 거쳐 위반자에 대한 해임·고발 조치

점검 대상자 명단 취합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조사	⇒	위반 여부 의견조회·점검	⇒	위반자 제재 요구·후속조치
상반기: 1~3월 하반기: 7~9월 (위원회↔각 공공기관)		(위원회↔국세청 등)		상반기: 4~7월 하반기: 9~11월 (위원회↔해당 공공기관)		상반기: 7~8월 하반기: 11~12월 (위원회↔해당 공공기관)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업제한제도(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를 공문으로 안내(전 공공기관)

○ 상·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한 내 청렴포털에 빠짐없이 입력(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문 상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채용 제한 사유를 명시(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 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요청 시 밀접업무 관련성 등 심사 철저(전 공공기관)

○ 위원회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시 사실관계 검증 및 위반자 후속 조치(해임·고발)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3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내실화

◇ 각급 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선방안 의견수렴, 기관 유형별 맞춤형 워크숍** 실시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고, **청렴컨설팅**으로 각급 기관 **청렴도 향상 노력 지원**

<확대> 청렴컨설팅 대상기관(28개) 및 심층·진단분석 대상기관(7개) 확대·지원

□ 평가대상 기관과의 소통에 기반한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

○ **(평가대상 합리화)** 지방의회 전체(243개), 격년제 기관 중 전년도 평가 미실시 기관(대학) 등 **부패 취약분야 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 ('24년) 718개 → ('25년) 약 700개 기관(잠정)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

- 격년제 기관 중 전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국립대학교 영역 기관** 및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 기관을 선정해 중점 평가 실시

*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흡기관,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부패 수준 취약분야 선정

○ **(평가지표 개선)**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종합청렴도 평가모형 **보완·정교화**

- **(청렴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핵심설문 중심 구성, 부가설문은 활용성이 낮은 경우 제외하고 필요시에만 추가

- **(청렴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 실시

※ 지표 감축 등 평가지표를 개편한 '24년도 지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표 수립·검토 중

※ 적용지표(안)은 '25년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개(3월), 실시계획에 최종 확정·반영(5월)

○ **(소통·환류 강화)** 평가체계 **개선방안·아이디어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관 유형별 맞춤형 워크숍 개최**

- 각급 기관 **우수시책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전파**하고,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유인 제공**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청렴컨설팅 대상 확대로 각급 기관 청렴도 향상 노력 지원

○ **(대상기관 확대)** 청렴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25년도 **대상그룹 확대** ('24년 12개 ⇒ **'25년 14개**) 확대

* 청렴컨설팅 신청 그룹 수 : ('22년) 24개 → ('23년) 32개 → ('24년) 35개 → ('25년) 39개

○ **(운영방식 개선)** 문제점 진단을 위한 **설문 항목 개편** 및 **외부 자문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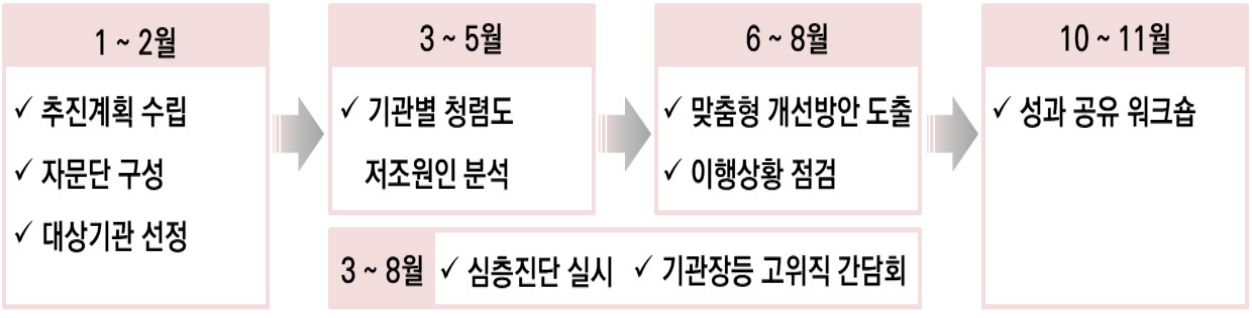
※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리더십 발휘를 위해 기관장 간담회, 기관장 참여 교육 등 컨설팅 참여 유도

○ **(심층 진단·분석)** 수년간 청렴도 등급 저조 기관, 외부의 전문적 분석 필요 기관 등을 우선 선정해 **부패요인 심층 진단·분석** 실시 확대

※ 심층진단 대상 기관 수 : ('23년) 4개 → ('24년) 5개 → **('25년) 7개 예정**

※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관련 '25년도 예산 : **전년대비 18백만원 증액 편성**

【 청렴컨설팅 진행 흐름도 】



[협조 요청 사항]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평가 대상기관)

- 평가 결과(등급)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 ’24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미제출 기관은 조속히 제출 요청

- ’24년도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2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장 주관 회의 등 실시

※ ’25년도 평가지표는 ’24년도 지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립 검토 중

- 청렴도 우수기관 업무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수요조사 회신

※ 대상기관(약 20여 개)은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25년도 평가 기본계획(3월) 관련 **의견 제출**(3월, 평가 대상기관)

- 측정업무 추가·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적극 제출

-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3~4월 예정) 적극 참여

○ ’25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평가 대상기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실태 자료 제출, 청렴노력도 실적 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 자료제출 내용 및 시기는 제출시기별로 별도 안내(공문 등) 실시 예정

※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기준 확인 및 철저한 검수확인 요청

-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충실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하반기)

※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청렴교육

◇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학교수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업무분야별·세대별 맞춤형 청렴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신규> 국공립대학 교수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청년대상 교육 확대 등

□ 법정의무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 **공직자는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신규자와 승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고위직(기관장 포함)**은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대면교육 이수 대상자**로 지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시행령 88조의2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징구**

○ **(교육실적 점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준수 여부** 관련 공공기관 교육운영 실적 점검 실시

구 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대상 기관수	2,198	51	17	226	17	226	17/176 (193)	39	1,429

- '24년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추진 실적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취합 및 점검**(서면, 현장점검 등) 실시

-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거나 **교육실적을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 등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교육지침 안내 및 의견수렴 등 컨설팅 병행 예정

【'23년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결과】

■ (전체 이수율)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96.1%**로 전년대비 **0.5%p 상승**

※ ('18)91.2% → ('19)93.1% → ('20)93.3% → ('21)95.0% → ('22)95.6% → ('23)96.1%

- 공공기관 유형중 교육청의 이수율(98.6%)이 가장 높은 반면, 국립대학 이수율(75.9%)이 가장 저조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이수율	**96.1%**	96.6%	93.6%	92.6%	**98.6%**	**75.9%**	96.0%
전년대비 증감율	**▲0.5%p**	▼0.5%p	▲0.6%p	▲3.4%p	▲0.3%p	▲0.9%p	▲0.8%p

* 광역자치단체 94.1%, 기초자치단체 93.4%, 광역의회 91.8%, 기초의회 92.9%

■ 고위직(기관장 포함) 등 대면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년 대비 **4.1%p** ('22년, 92.2% → '23년 **92.2%**) **상승**

○ **(교육 지원)** '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 교육여건 취약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등 현장 담당자의 체계적 제도운영 지원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내용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방법(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안내 예정

- **국공립대학 교수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상반기) 신규추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연중, 23개 기관 신청)'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24년도 청렴교육 실적 제출(전 공공기관)

- '24년 한해 동안 각급 기관에서 실시한 청렴교육 실적을 청렴포털 시스템*에 입력·제출(~2.29) * 청렴포털 주소 : http://ep.clean.go.kr

○ 「'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는 '25. 2월 중 실시 예정

○ '24년 청렴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3월~4월) 시 협조(해당 기관)

- 교육실적 부진,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제공(참고2 참조)

○ **(대면교육 의무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대면교육 이수가 의무인 **신규·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과정명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신규 공직자 과정
교육내용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반부패 법령·제도 교육 및 기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 함양	신규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법령 교육 및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을 위한 판단력 향상
횟수·일수	연 12회, 1일	연 10회, 2~3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내외	

○ **(문화콘텐츠 결합)** 반부패 법령·이론 강의 외 교육생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 콘텐츠 기반 소통·공연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확대

※ 기존 '승진자' 과정을 개편하여 매회 80명, 총 10회 운영(1일 과정)하며, 일부 회차는 고위직 과정과 통합하여 권역별 방문교육(강원·세종·서울)으로 진행

○ **(업무분야별) 계약·인사·체육·공사감독** 신규추진 등 부패취약분야 감사 지적사례, 업무 수행 관련 반부패 법령·제도 등으로 구성된 업무 분야별 **'부패대응역량 향상 과정'** 운영

과정명	계약	인사	체육(신규)	공사감독(신규)
교육 내용	해당 분야 맞춤형 반부패 법령 교육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초빙 강의			
횟수·일수	3회, 1일	2회, 1일		
교육인원	회당 40명 내외			

○ **(청렴업무 담당자)** 각급 기관 청렴업무 담당자의 심도 깊은 반부패 법령·정책 학습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과정', '공직자 청렴 역량 심화과정'** 운영

과정명	내부강사 양성과정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교육내용	청렴업무 담당자의 청렴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 학습 및 최신 동향 교육	
횟수·일수	연 6회, 3일(실시간 온라인)	연 3회, 5일
교육인원	회당 300명 내외	회당 40명 내외
비고	과정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내부강사 자격 부여	감사·청렴업무 담당자에 한해 교육 이수 시 내부강사 자격 부여

○ **(권익구제 통합 과정)** 기존 **고충민원·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통합**하여 강의 중심 교육에서 **토론·실습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으로 재구성

구분	고충처리 + 권익개선	행정심판
과정명	권익구제 통합 과정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교육내용	· 고충처리 법령·제도 이해 및 대응방법 및 사례 · 분야별 제도개선 사례 및 국민신문고 등 시스템 활용법	· 행정심판 이론 및 제도의 이해 ·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심판 관련 주요 법령의 이해 ·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횟수·일수	연 6회, 3일	연 4회, 1일
교육인원	회당 80명 내외	회당 100명 내외

○ **(청렴윤리경영 과정)** **청렴윤리경영** 과정 중 실무급·관리자급 과정을 강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심화 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

※ ('24년) 청렴윤리경영 관리자·담당자 과정 → ('25년) 기본·심화과정

과정명	최고관리자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교육내용	·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 리더십 실천방안 및 토론	·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 반부패 정책 동향·컴플라이언스 제도 이해	· ESG경영 실무 · 컴플라이언스 제도 적용
횟수·일수	연 2회, 1일	연 5회, 3일	연 2회, 2일
교육인원	회당 약 40명	회당 약 40명	회당 약 40명

○ **(방문교육)** 기관 특성 및 교육 대상의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

- **(청렴라이브)** 반부패·청렴특강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서트 형식의 찾아가는 방문교육**인 **'청렴Live'** 운영(연 80회)

※ 수요조사 기실시(1월), 기관장·고위직 참석률, 교육인원, 기 교육 여부, 청렴도 등급 등 고려하여 대상 선정(교육 일시·내용은 기관 선정 후 협의 통해 결정)

- **(청년 대상 청렴교육)** 사회초년생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청년보좌역** 대상 직장생활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3회, 서울·세종·청주) 확대

※ 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3월중 예정) → 교육 운영(회당 80명, 자세한 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양성을 통한 각급 기관 자체교육 지원

○ **(콘텐츠 보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용을 위해 청렴연수원 개발 **이러닝 과정 운영** 및 **교육·영상 콘텐츠** 등 적극 배포

- **'청렴배움터'**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등 **5개 과정 이러닝 과정 운영**(2월~)

※ 매월(2~11월) 1일~25일경 운영(구체적인 이러닝 과정은 참고3 참조)

※ 자체 이러닝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에 해당 이러닝 과정 공유 가능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콘텐츠 확인** 및 **활용** 가능

* 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청렴교육 자료] → [참고자료] 및 [시청각자료]

※ 구체적인 콘텐츠 내역은 참고1(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참조

○ **(강사 제도 운영)** 각 공공기관의 **자체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청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내부강사·전문강사 양성**

- 기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청렴·감사업무 담당자**를 **내부강사로 양성**, 수료 시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능***

* 내부강사과정 교육수료 및 평가 합격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교육수료 시 당해연도까지 내부강사 자격 인정

- 반부패 법령·지식 및 강의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문강사 양성 과정 수료·필기시험·강의시연 평가** 등을 통해 **선발·양성**('25.2월 기준 총 445명 양성)

※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문강사 대상 최신 반부패 동향, 강의기법 등 보수교육 과정 운영

[협조 요청 사항]

○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해당 기관)

○ 매월 연수원 **집합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시 소속기관 통보 및 **적극 홍보**(전 공공기관)

※ 연수원은 교육 1개월 전 공문을 통해 교육 과정 및 교육생 모집 안내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고위직·신규자 등) 및 교육 희망자에 대한 **청렴 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 자체 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내부강사·전문강사) 적극 활용**(전 공공기관)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강의 요청 가능

○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연수원 교육 콘텐츠 활용(전 공공기관)**

※ 교육콘텐츠는 연수원 홈페이지·유튜브(권익비전)을 통하여 활용하거나, 연수원에 공문(수신처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을 통하여 요청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 공기업 등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각급 기관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지원**

<신규> 중소·중견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실행 매뉴얼' 발간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 국내외 **반부패 규범 강화, ESG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공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 청렴윤리경영 CP: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Compliance Program)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CP를 분석하고 공통·핵심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개정본)'('23.6월),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4.12월) 배포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기관 선정**(상반기, 15개 내외) 및 **전문가 매칭**, 규모·산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연중)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통해 최신 국제 반부패 규범 및 **ESG 동향, 국내·외 윤리경영 사례** 등 **정보 제공**(월 1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윤리경영 표준 규정**, 부패위험 평가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윤리경영 실행 매뉴얼' 발간**(상반기 예정)

□ 각급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연 3회)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감사요청·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외부통제 활동 실시

※ '24년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기관(235개) 중 234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중

○ **신규 도입 희망기관, 운영 미흡기관** 등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수시)

※ (주요내용) 제도 운영 관련 가이드 라인 제시, 직무 교육 지원 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수시)

※ (대상)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 기관 등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윤리경영 CP 자율 도입 추진(기관 자율)

※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23.6월, 개정본) 참고
: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청렴윤리경영 CP 도입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신청**(희망기관)

※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 선정(상반기 실시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적극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간담회 참석 대상은 '24년 청렴노력도 우수 기관 중 선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희망 기관)

4 기관간 협력을 통한 이첩·송부 사건의 신속 처리

◇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첩·송부한 부패·공익신고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독려**

○ 부패·공익신고 사건 **'사후관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조사·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도록 관리 강화**

- **(이첩·송부사건)** 이첩·송부한 신고사건이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도록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처리 독려

  *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사건의 감사·수사·조사를 종결해야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1항)

- **(장기 미회신 사건)** 이첩·송부 후 6개월 이상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반기별 공문 발송**으로 처리계획을 제출받고, **기관방문** 등을 통해 **처리 독려**

  ※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은 기관은 감사·수사·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

[협조 요청 사항]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시 협조(해당 기관)

※ 반기별 이첩·송부사건 점검 공문 시행 시 자료 협조

○ 해당 **감독기관으로 송부한 사건**의 경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재송부하지 않고 **감독기관에서 엄정 처리**(해당 기관)

○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신고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 담당자를 신속 지정해 관리** 강화(해당 기관)

※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1,027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24년)

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부패방지를 위한 '25년도 신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25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제도개선 주요 추진방향

공정사회 기반 조성

① **청년·미래세대와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강화**
- 각 대학에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교대·사범대 재학생 청렴 과목 이수 의무화, 신규 공직자 교육시 청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등
- 초·중·고 교과서에 반부패·청렴 관련 단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차기 교육과정에 청렴 컨텐츠 확대 반영

② **공직자 대상 무분별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
- 공무수행·의정활동과 관련없는 관행적 과태료 감면 방지 기준 마련

③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강화**
- 부정당업자 정보가 기관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 개선

국민안전 강화

①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운전면허 적성 검사제도 개편, 페달오작동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등

②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단속 절차·방법 규정 마련, 형량 강화 등

중소기업 등 보호

① **공공기관 계약시 경쟁입찰 강화**
- 법령이 정하지 않은 수의계약 사유를 자의적으로 사규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사례 개선

② **교육·연구용 시신 기증 통합관리 체계 마련**
- 기증자 모집·화장 등을 개별 의과대학이 담당하는 현행 체계 개선

□ 권고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기관별 컨설팅** 실시
- 이행률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권고과제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권고 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25.3월~)

- 점검 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권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25.3월~)

- 기존 문서로 제출했던 이행실적을 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 수시로 권고과제 이행현황 확인 가능

※ 중앙행정기관 시범 운영 후 전체기관 적용 확대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 (전 공공기관)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자체 발굴 및 자율적 제도개선** (전 공공기관)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통보 시 **점검결과 제출** (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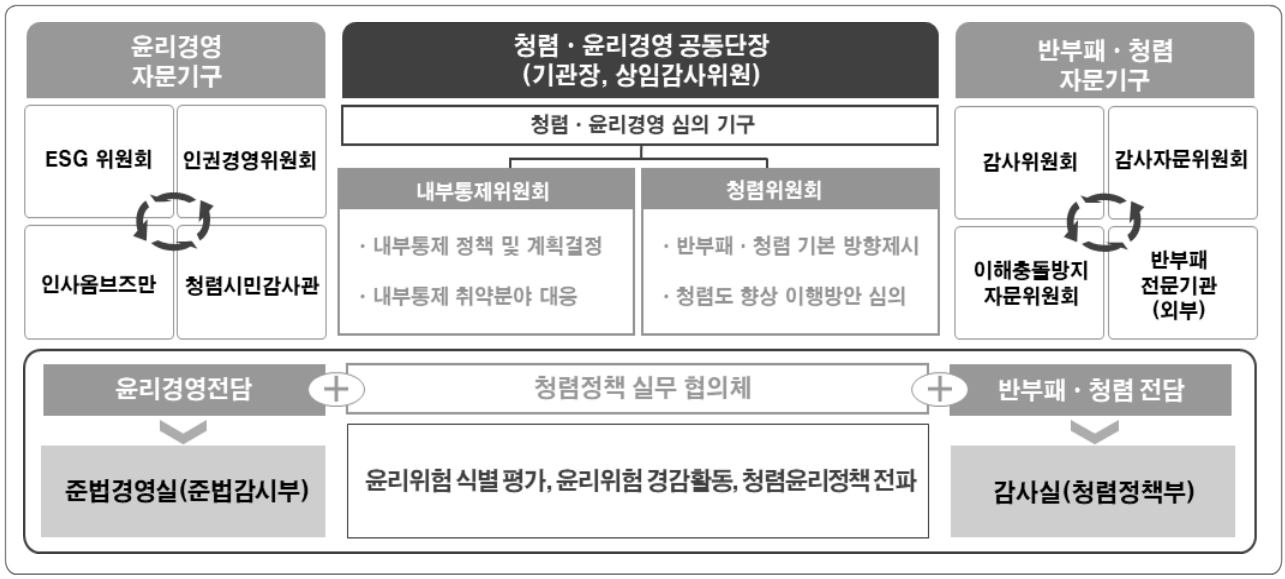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한국수력원자력의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 사례

1 기관, 주요사업 및 규모 소개

2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 체계



3 부패 취약분야 분석

□ 외부체감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개선에 역량 집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7개 항목**에 대한 취약수준을 **계량 측정하여 순위화**

- 권익위 내부체감도 평가(50점~32점) : 항목별 점수와 항목별 공기업 평균차가 낮은 순
- 부패위험 평가(30점~18점) : 고위험 28개를 부패인식 항목과 연계하여 비율이 높은 순
- 내부통제 평가(20점~8점) : 고위험 80개를 부패인식 항목과 연계하여 비율이 높은 순

부패인식 항목	특혜 제공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예산 부당집행	부정 청탁	부당 지시	사익 추구
내부체감도 평가	50점	44점	47점	38점	41점	35점	32점
부패위험 평가	28점	30점	24점	26점	20점	20점	24점
내부통제 평가	16점	20점	12점	18점	8점	14점	12점
합 계	**94점**	**94점**	**83점**	**82점**	**69점**	**69점**	**68점**

①특혜 제공 > ①인사 위반 > ③갑질 행위 > ④예산 부당집행 > ⑤부정 청탁 > ⑥부당 지시 > ⑦사익 추구

○ **"2024년 청렴위원회"**(기관장,상임감사 공동 주관) 의결을 통해 **"특혜 제공, 인사 위반, 갑질 행위"** 분야의 집중 개선을 확정·공표

- 직원 설문을 거쳐 부패 취약 분야별 개선 대상을 정하고, 전사적인 개선 활동 추진

특혜 제공 개선 대상	인사 위반 개선 대상	갑질 행위 개선 대상
1. 인사(승격, 이동 등) 특혜 해소 2. 복지(사택 운영 등) 특혜 해소 3. 정보 관련 불균형 특혜 해소	1. 겸직 제도 신설 등 개선 필요 2.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 3. 포상 심사 제도 개선 필요	1. 본사와 사업소 간 갑질 2. 상급자와 하급자 갑질 3. 동료 직원 간 갑질

4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특혜 제공 개선 인사, 복지, 정보 관련 특혜 제공 개선 노력

□ **[인사특혜]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성과 중심의 승격제도 운영 강화**

○ 연공에 따른 **초급간부 승격 응시 자격 부여 기준** 대폭 축소

- 초급간부 고시승격 자격(6년 이상→5년 이상), 심사승격 자격(11년 이상→10년 이상)

○ **특별승격 후보자 공적·성과 검증을 위한 "공적사항 검증반" 신설** 및 **음주운전 여부 조회 기간 확대**(1년→3년) 등 성과와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 강화

□ **[인사특혜] 누구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이동 제도 운영**

○ **"순환·이동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비선호 사업소 및 기피 업무 종사자 우대

- 비선호 사업소 근무자의 순환 마일리지는 낮추고, 기피 업무 종사자의 이동 마일리지는 향상

□ [사택 운영] 전사 사택 운영 기준 재정립 및 관리 개선

○ **사택 운영 제도·기준 및 관리 개선**으로 신규·선호 사택 계속 거주 또는 배정을 위한 비윤리적 행위 근절 노력

- 사택 퇴거 불이행 강제금 상향(평당 3만 원/월→7만 원/월), 입주 수칙 미준수 페널티 강화
- 가족 사택 입주 기준 명확화, 사택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사업소별→전사 통합)
- 신규 사택 건축(662세대) 및 노후 사택 리모델링(60세대) 계획 조기 수립으로 근본 원인 해소

□ [정보 불균형] 민감한 부패위험 정보 공유로 경각심 제고

○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 신규 개발**로 특정 조직만 아는 부패위험 정보(감사, 신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불신과 그릇된 오해를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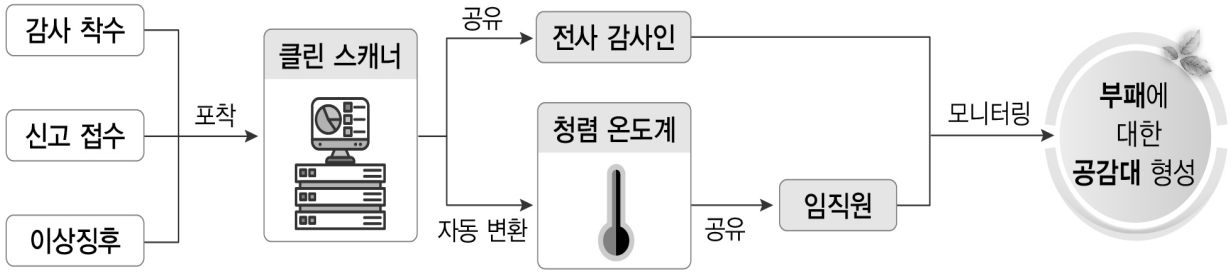
이상징후 포착 시스템 (클린 스캐너)	부패위험 경보 시스템 (한수원 청렴 온도계)
대내·외 감사 착수, 사내 신고 접수, 계약·법인카드·근태·출장 이상징후 포착	청렴 온도, 청렴 메시지, 부패위험 단계 등 다양한 포착 정보 현황을 공유

- **[클린 스캐너]** 금기시 하던 감사·신고 정보부터 다양한 이상징후까지 신속하게 자동 포착

시스템 특징	
	① 3대 부패 취약 분야와 관련된 사내 신고 접수 현황을 수집 ② 인사 위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근태·출장 이상징후 포착 ③ 모니터링 기준을 월말 기준에서 일일 시점으로 대폭 강화

- **[청렴 온도계]** "클린스캐너"가 포착한 정보를 청렴 온도로 자동 변환하여 임직원들과 공유

매일 아침 기관의 부패위험 수준을 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청렴 온도의 고, 저로 예보



부패위험이 증가하면 청렴 온도가 하락하고, 경계·심각 단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위험 경보 발령

인사 위반 개선 겸직 허가와 업무 분장, 그리고 포상 제도 개선 노력

□ [겸직 허가] 겸직 허가 제도 기준 신설 및 교육 강화

○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높이고, 겸직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은 강화

- '겸직 허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겸직 허가 운영 세부 기준' 신설
- "N잡이 웬 말?" 시트콤, 웹툰 등 제작 공유, 신재생 분야 및 휴직자 겸직 점검 시행

□ [업무 분장] 예방중심의 정비 조직체계 정착으로 업무 혼선 예방

○ 전문기관 유효성 평가에 따른 **엔지니어링 업무 재배치**로 인사 운영 전문성 향상

- 업무조정 협의체 운영(13회/130건), 자문위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유효성 평가

□ [포상 제도] 포상 후보자 심사 제도 개선 및 공적 심사 강화

○ **포상 심사 제도 개선**으로 선심성 포상과 들러리 서기, 반복·유사 포상 예방

- 포상 후보자 2배수 의무 추천 개선, 반복적 포상 제한 기준 구체화, 절차 간소화
-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선심성·유사 성격의 포상 계획 취소 및 통합

갑질 행위 개선 본사와 사업소,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 직원 간 마음 챙기기

□ [본사와 사업소] "상호존중과 배려" 의 공감대 형성

○ **상호존중과 배려**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시행

- 준법의 달을 지정하고,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시행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 조사, 갑질·직장내 괴롭힘 발생위험 자가진단
  * CEO·상임감사위원의 상호존중과 배려 실천 의지 영상 방영, 찾아가는 사업소 교육
- 윤리 행동 미준수 사례 위주의 청렴 만화 웹툰 '청렴 점프 Up' 제작·발송
- 옴니버스 형식의 갑질 사례 숏폼 "누구나 빌런(Villain)이 될 수 있다." 제작·상영

□ [상급자와 하급자] 직장내 괴롭힘, 갑질 행위 촉발 요인 치료

○ 직장내 문제 치료에 특화된 **정신건강 상담 조직 상시 운영**

-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및 개인별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1,496명 참여)
- 직장내 괴롭힘 맞춤형 개인 상담 '한마음상담실' 상시 운영 → 신고, 사외 의료기관 연계

○ 권익위 청렴연수원장 초청 특강, 역지사지 역할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동료 직원 간]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소통과 화합 유도

○ **"전사 사내 가수왕 선발 대회" 개최**로 동료 간 활기찬 변화와 소통 유도

- 온라인 경연 대회로 전 임직원의 참여와 소통 제고(임직원 약 5,000여명 투표 등 참여)

○ **"전사 E SPORTS 대회" 개최·방영**으로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81개 팀 284명 참여)

5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기관장의 의지 솔선수범으로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다짐

□ **“2024 청렴위원회” 에서 3대 부패 취약 근절과 개선을 다짐**

○ ‘사장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으로 동참 당부, 경영 협의체 활동을 통해 공론화

□ **“새로고침! 한수원 발대식” 에서 집중 개선 원년 선포 및 세러모니 시행**

○ 단장 및 단원들과 함께 3대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의 의지 대내·외 표명

기관장의 소통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으로 함께 고민

□ **“2024 청렴위원회” 에서 경영진들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향과 방안 논의**

○ 3대 부패 취약분야 발생 원인과 사례 파악, 전사적인 전담 협의체 구성 협의

□ **“새로고침! 한수원” 단원들이 생각하는 부패 취약 요인과 해결방안 토론**

○ 전담 협의체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약속, 경영진 행동 변화 촉구 등

기관장의 활동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는 집중 개선 활동

□ **기관장 직속의 3대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전담 협의체 운영**

새로고침! 한수원	기관장 직속의 새(New), 로(Rule), 고(Go), 침(Cheer) 4대 워킹그룹 활동 집중 시행

<table>
<tr><td>새(New)
“의식 개선”</td><td>· 新 청렴문화 형성을 위한 청렴행동 약속 가이드라인 정립, 청렴 슬로건 선정
-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8가지 청렴 행동약속 가이드 라인 제작·배부
- 한수원의 新 청렴문화을 선도할 슬로건(청렴할 결심! 빛나는 한수원) 공모</td></tr>
<tr><td>로(Rule)
“제도 개선”</td><td>· 사규 속 특혜 제공,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유발 조항 정비
- 203개 사규 속 85개 부패 유발 조항에 대한 정비 보고서 발간
- 전문가 자문, 사규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공모전 시행
<table>
<tr><td>부패 유발</td><td>법제원칙 미준수</td><td>상위 법령 저촉</td><td>의미 불명확</td></tr>
<tr><td>10개 조항</td><td>31개 조항</td><td>22개 조항</td><td>22개 조항</td></tr>
</table></td></tr>
<tr><td>고(Go)
“자긍심 고취”</td><td>· 청렴 1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캐릭터 및 이모티콘 개발
- 지역특성과 한수원의 청렴 이미지를 대표할 캐릭터 ‘청풍이’ 개발
- 명칭 공모전, 청렴 캐릭터를 활용한 부패 근절 이모티콘 9종 제작</td></tr>
<tr><td>침(Cheer)
“의식 강화”</td><td>· 청렴 의식 강화와 부패 취약분야 근절을 위한 홍보물 등 콘텐츠 제작
- 3대 부패 취약분야 근절의 의식 강화를 위한 웹 포스터 등 제작
-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활용한 하계 휴가철 집중 온라인 캠페인 시행</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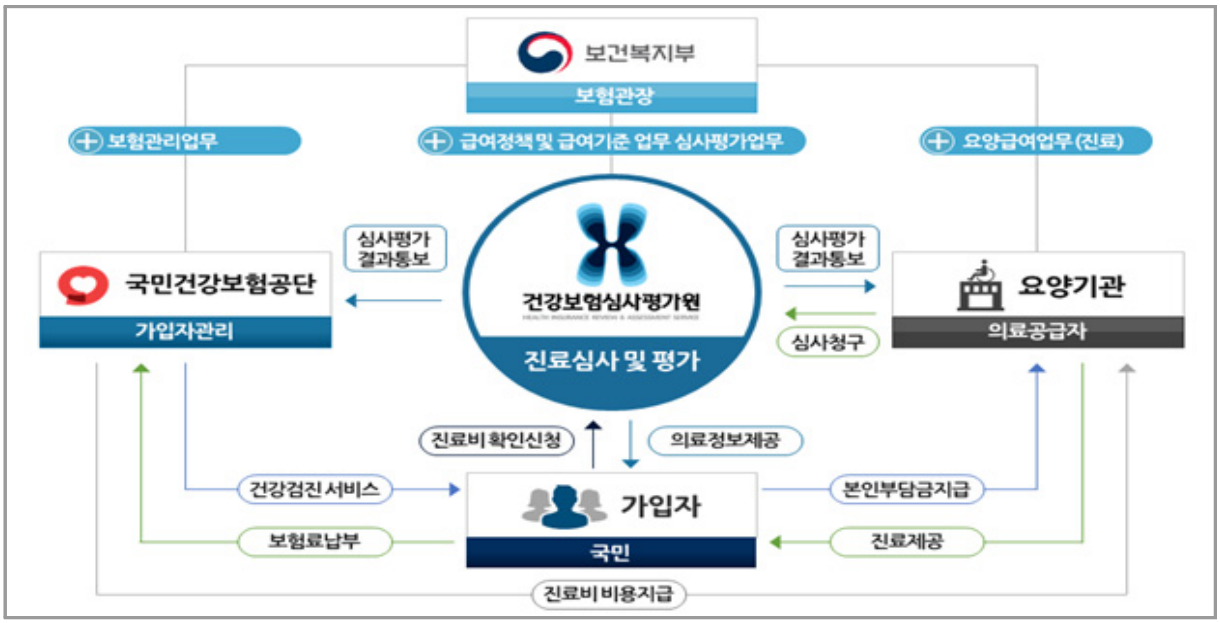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1 기관 현황

○ **(조직구성)** 본원(29실, 1연구소) 및 12개 지역본부

○ **(주요업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및 연구·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

* 연간 약 126조 9천억(16.2억 건) 규모의 진료비 심사 수행('23년 기준)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방향

○ **(業특성 고려)** 핵심 업무인 **'진료비 심사'를 부패취약분야로** 중점 개선

○ **(체감도 향상)** 취약분야인 **'업무 투명성(외부)'** 및 **'갑질 인식'(내부)** 중점 개선

※ 외부 **'업무투명'**과 **'소극행정'** 최저점, 내부 **'갑질'**과 **'특혜제공'** 최저점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	**2등급**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2등급**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	**1등급**

2 주요 추진내용

1 '진료비 심사' 업무 이권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진료비 심사 업무란? >

- (내용)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심사 후 의료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
- (절차)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 1차심사(심사직원) → 2차심사(심사위원) → 심사결과 확인(의료기관)
- (조직체계) 본원: 전국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심사
  지역본부: 해당 지역 의원·병원(1·2차병원) 심사

○ **(배경)**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등) 80%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 특성상 '진료비 심사' 부패발생 위험 높음 ※ '23년 이해충돌 사례 발생(해임 조치)

○ **(개선노력)**

<문제점❶> 채용 전 근무한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및 공동수행자 지정**하고 있으나, **지역본부는 지역 병·의원과 유착 위험 높음**

☞ 지역본부 **'사적이해관계 사전신고제' 도입, 업무 배정 시스템 구축**

< 사적이해관계 사전신고제 도입 및 심사업무 배제 >

구분	사전 관리	업무 배정	이해충돌 신고	진료비 심사
기존 (법령준수)	無	[무작위 배정]	[신고] - 과거 근무 의료기관 심사 업무 배정된 경우	[공동수행자 지정 후 수행] - 과거 근무 의료기관 심사 업무 배정된 경우
개선 (원천차단)	[사전 신고] - 과거(입사 2년 이내) 근무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 과거 근무기관 제외 후 업무 배정	[미발생]	[원천 차단] - 과거 근무 의료기관 완전 제외 후 심사

<문제점❷> 심사 일관성 **'들쭉날쭉'** 의료계 불만, '불투명한 과정', '불명확한 기준'

☞ **의료단체 의견 수렴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 진료비 심사 기준 개선 >

①의견수렴	② 안건 발굴	③ 전담반 운영	④ 심층 검토·추진
· 의료단체 의견 수렴	· 안건 379건 발굴 - 심사자별 해석 편차 → 축소·개선 - 삭감·조정 기준 → 명확한 정의 - 임상적 판단 → 급여기준에 명시	· 「기준개선 검토 추진단」 운영 - 기관장, 진료비 심사위원장, 심사기준 담당부서 등	· (협의·자문) 보건복지부, 전문가48명, 의료단체(30개) · (추진) 379개 안건 반영하여 심사기준 개선

기관장 주도 모니터링 안건 검토현황 정기 점검(4월, 8월)하는 등 **기관장 주도 全과정 모니터링**

○ **(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완전 배제(224건 심사$^{시스템\ 구축\ 전}$→Zero^{후})**, 일선 의료현장 의견 **379건 검토·반영**, 심사 관련 의료계 **민원 51% 감소**

2 "어떤 약을, 얼마로 건강보험 적용?" '약제등록' 업무 정보제공 강화

○ **(문제점 도출)** 자체진단을 통하여 **외부고객 개선의견 수렴**

- 약제 건강보험 적용 업무 관련 **투명성 이슈, '정보 공개 강화', '실시간 공개', '신속한 처리' 등 요구↑**

○ **(개선노력)** 처리단계별 **실시간 안내화면 화면, 알림서비스 신설**

< 진행단계 안내 및 문자발송 화면 >

○ **(성과)** 약제등록 업무 **'투명성' 체감도 8.1점↑ (72.8점'23→80.9점'24)**

3 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한 고위직 솔선수범

○ **(기관장 소통)** 직접 **청렴교육(갑질, 이해충돌 등) 및 소통 '런치챗'**(6회)

○ **(Mz직원 소통) 상임감사 소통**을 통해 '갑질', '이해충돌' 등 의견 수렴

○ **(청렴FGI)** 청렴 취약부서 선정 및 집중 인터뷰 실시, **내부직원이 체감하는 갑질·특혜 원인 파악**(근태 눈치주기, 근무평정 공정성 등)

○ **(제도개선)** 인사 투명성 제고 위해 승진대상자 근무평정 결과 공개

4 피로도 down, 청렴인식 up! 흥미유발 게임형(Gamification) 교육

○ **(교육·홍보)** 판소리를 활용한 청렴 교육 '청렴 라이브', 임직원 궁금증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갑질 Q&A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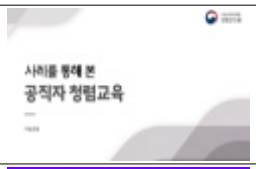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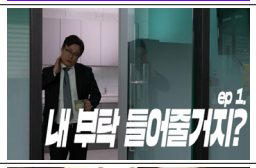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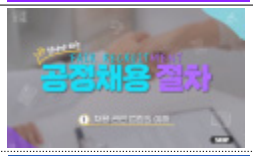
○ **(참여형 활동)** 全직원 청렴 퀴즈대회 '청렴 골든벨', '왕중왕전' 등

<청렴 라이브>	<청렴 골든벨>	<청렴퀴즈 왕중왕전>

참 고 자 료

[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연번	주요 내용		개발시기
1		**<청렴채널 ⓘ> - 영상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반부패 관련 주제를 이용해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교육용 영상물	'24년
2		**<교육 대상별 맞춤형 표준강의안 및 강사용지도서> - 강의자료** - 반부패 법령 교육(각 1종)과 더불어서 경찰·교직원·연구원 등 교육수요가 높은 직종 대상 맞춤형 사례 (각 6종) 구성	'24년
3		**<청렴 종합병원> - 영상물**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법령 이해도 제고	'23년
4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 영상물** -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상 속 청렴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년
5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 영상물** - 직장 내 부패 유형인 '갑질' 사례를 다룬 브이로그(V-log) 형태의 영상물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강조	'23년
6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	'23년
7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8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9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10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2 '25년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 일정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3월 (11개)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1기	40명	3.5.(수)~3.7.(금)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1기	80명	3.6.(목)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1기	300명	3.11.(화)~3.13.(목)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온라인)	1기	200명	3.11.(화)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기	40명	3.12.(수)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1기	80명	3.12.(수)~3.14.(금)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1기	40명	3.19.(수)~3.21.(금)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40명	3.20.(목)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1기	40명	3.25.(화)~3.27.(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1기	100명	3.28.(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1기	40명	3.31.(월)~4.4.(금)
4월 (8개)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1기	40명	4.8.(화)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강원)	2기	100명	4.9.(수)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강원)	2기	100명	4.9.(수)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2기	80명	4.9.(수)~4.11.(금)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2기	40명	4.14.(월)~4.15.(화)
	청렴스테이 과정	1기	40명	4.16.(수)~4.18.(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1기	50명	4.21.(월)~4.24.(목)
	인사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40명	4.25.(금)
5월 (8개)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2기	40명	5.7.(수)~5.9.(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3기	40명	5.8.(목)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3기	80명	5.9.(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2기	300명	5.13.(화)~5.15.(목)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3기	80명	5.14.(수)~5.16.(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워크숍)	2기	40명	5.20.(화)~5.21.(수)
	공사감독 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1기	40명	5.22.(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4기	40명	5.28.(수)
6월 (7개)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3기	40명	6.10.(화)~6.12.(목)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3기	300명	6.17.(화)~6.19.(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세종)	5기	100명	6.18.(수)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세종)	4기	100명	6.18.(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4기	40명	6.19.(목)~6.20.(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2기	100명	6.27.(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2기	40명	6.30.(월)~7.4.(금)
7월 (9개)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6기	40명	7.2.(수)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5기	80명	7.8.(화)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4기	80명	7.9.(수)~7.11.(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4기	300명	7.15.(화)~7.17.(목)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1기	40명	7.15.(화)~7.16.(수)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3기	40명	7.16.(수)~7.18.(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7기	40명	7.23.(수)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2기	40명	7.24.(목)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7.28.(월)~7.29.(화)
8월 (7개)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6기	80명	8.7.(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8기	40명	8.13.(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6기	40명	8.13.(수)~8.14.(목)
	인사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2기	40명	8.22.(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3기	40명	8.22.(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5기	300명	8.26.(화)~8.28.(목)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4기	40명	8.26.(화)~8.28.(목)
9월 (9개)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2기	40명	9.2.(화)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4기	40명	9.3.(수)~9.5.(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3기	40명	9.8.(월)~9.12.(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서울)	9기	100명	9.10.(수)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서울)	7기	100명	9.10.(수)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5기	80명	9.15.(월)~9.17.(수)
	청렴스테이 과정	2기	40명	9.17.(수)~9.19.(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2기	50명	9.22.(월)~9.25.(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3기	100명	9.26.(금)
10월 (8개)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8기	80명	10.1.(수)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4기	40명	10.13.(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6기	300명	10.14.(화)~10.16.(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0기	40명	10.15.(수)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5기	40명	10.21.(화)~10.23.(목)
	공사감독 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2기	40명	10.22.(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8기	40명	10.27.(월)~10.29.(수)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6기	80명	10.29.(수)~10.31.(금)
11월 (7개)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9기	80명	11.4.(화)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1기	40명	11.5.(수)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2기	30명	11.10.(월)~11.11.(화)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2기	40명	11.11.(화)~11.12.(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9기	40명	11.20.(목)~11.21.(금)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3기	40명	11.20.(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2기	40명	11.26.(수)
12월 (3개)	문화가 있는 청렴교육과정	10기	80명	12.4.(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4기	100명	12.5.(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5기	40명	12.11.(목)

3 '25년 청렴연수원 운영 이러닝 과정별 주요내용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4	4시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 이해도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7	7시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사례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7	7시간	청탁금지법 사례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4	2시간	채용 업무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절차와 지침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정차 이해도 제고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3	3시간	청렴윤리경영의 개념 등 이론과 관련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 도모

붙 임

[공직유관단체] 202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1] 공정채용 시스템 공고화			
①	'25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2~10월	전 공공기관
②	'25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독기관별 결과 회신	~10.20	전 행정기관
③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이행점검 시 적극 협조	10월	전 행정기관
[2] 2030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정착			
①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3] 지방 현장의 투명성 증진			
①	감사사항 관련 통보에 따른 조치	3월 이후	지자체
②	의회사무 관련 사항 통보에 따른 조치	3월 이후	지방의회
③	위험근무수당 자체조사결과 제출	2월	해당기관
④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협조	연중	해당 지방의회
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협조	연중	해당 지자체
[4]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형 반부패 정책 추진			
①	디지털 기술 활용 반부패 정책 사례 공유 협조	연중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2.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1] 공직사회 반부패 행위규범의 실효적 정착			
①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	2월~	전 공공기관
②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③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 활용 및 전파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조사 협조	9~12월	전 공공기관
⑤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협조	상반기	해당기관
⑥	자체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⑦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⑧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⑨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⑩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여	9월(예정)	전 공공기관
⑪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⑫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1~3월 7~9월	전 공공기관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차단 노력 확대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적극 협조	연2회	해당 기관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현지점검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위원회 주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참여 및 기관별 자체 교육 적극 실시	수시	해당 기관
④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집중신고기간 홍보 적극 참여	수시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강화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②	맞춤형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 공문 발송 시 수요 제출	상반기	해당 기관
③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홍보 콘텐츠 공유 시 확산·배포 협조	상반기	모든 기관
④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실무 협의회 개최 시 적극 참여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⑤	불이익조치 금지, 화해모색 등 적극적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연중	해당 기관
⑥	신고자와의 법률 분쟁시 기관측 대리인(변호사 등)에 대한 신고자 비밀보장 철저	연중	해당 기관
⑦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결정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이행	연중	해당 기관
⑧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건 및 구조금 손해배상대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⑨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통보 사건 관리	분기별	해당 기관
⑩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연체기관 현지점검	2월말경	해당 기관
⑪	추천 요건에 부합하는 포상 대상 사례 적극 추천	4월경	모든 기관
[4] 실효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청렴포털 입력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채용공고 시 비위면직자등 제한사유 명시	수시	전 공공기관
④	퇴직 전 공공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당부	수시	전 공공기관
⑤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자료제출 및 후속조치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내실화			
①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 이행	연중	평가 대상기관
②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관련 의견 제출	~3월	평가 대상기관
③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 점검 등 협조	연중	평가 대상기관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청렴교육			
①	'24년도 부패방지교육 이행 실적 제출	~2월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	2월 중	전 공공기관
④	'24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시 협조	3월~4월	해당기관
⑤	청렴연수원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	수시(별도 통보)	해당 기관
⑥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안내 및 홍보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⑦	교육생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⑧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⑨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연수원 교육콘텐츠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①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등 자율실천	수시	희망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	연1회	전 공공기관
③	청렴시민감사관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	수시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4] 기관간 협력을 통한 이첩·송부 사건의 신속 처리			
①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②	공공기관의 청렴포털로 신고된 사건 관리 강화	연중	해당 기관
[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자체발굴 및 자율적 제도개선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점검결과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2 부서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김종혁	부패방지교육 제도·운영, 교육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044) 200-7939
청렴조사 평가과	김기용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2	044) 200-7940
	김혜진		044)200-7634	
	김일문		044)200-7633	
	김소리		044)200-7638	
	연나영		044)200-7636	
	김선미		044)200-7635	
	안영인		044)200-7637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 분석과	우명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56	044) 200-7941
청탁금지 제도과	한세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권문택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	044)200-7704	
	정나리	청탁금지법 홍보	044)200-7708	
	박선미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044)200-7706	
	오정헌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044)200-7707	
행동강령과	정철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유어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이종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044)200-7677	
	서정민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044)200-7685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이진아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127	044) 200-7964
	배영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711	
	백소망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규 컨설팅 등	044)200-7294	
	김강우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등	044)200-7710	
	김보배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등	044)200-7291	
이해충돌 방지팀	윤지현	법령정비, 실태조사 및 유권해석	044)200-7674	044) 200-7963
	이예정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79	
	권나라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81	
심사기획과	박종혁	위험근무수당 관련 실태조사 후속조치	044)200-7692	044) 200-7943
	임성순	위험근무수당 관련 실태조사 후속조치	044)200-7688	
	신상철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200-7695	
	홍원태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이태완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98	
	신희석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부패심사과	김회성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044-200-7725	044) 200-7946
	손승목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044-200-7731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임한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4	044) 200-7977
	신경윤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후속점검, 현지점검	044-200-7650	
	최현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044-200-7582	
	김시준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홍보	044-200-764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보호보상 정책과	강현희	보호·보상 정책 관리	044)200-7754	044) 200-7948
	서지만	공공기관 대상 운영현황 실태조사,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맞춤형 교육	044)200-7757	
	김혜윤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044)200-7755	
	이지혜	공공기관 대상 운영현황 실태조사	044)200-7758	
신고자 보호과	정병학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안내	044)200-7773	044) 200-7949
	조수연	신고자 보호사건 관련 평가	044)200-7779	
신고자 보상과	오병철	포상 추천,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5	044) 200-7947
	이주현	지침 정비,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4	
	윤성광	보상금 상환,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8	
민간협력 담당관실	손정아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044-200-7164	044) 200-7917
	이지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044-200-7163	
제도개선 총괄과	전이슬	제도개선 업무 총괄	044)200-7216	044) 200-7921
	김종희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청렴연수원	구교전	고위직·지방의회 과정 운영	043)901-6132	044) 200-7973
	김유현	문화교육, 인사·계약·체육분야 과정 운영	043)901-6149	
	김명혜	신규자 과정 운영	043)901-6133	
	김성래	내부강사 양성과정 운영	043)901-6134	
	나은정	전문강사 양성과정 과정·청년인턴 청렴교육 과정 운영	043)901-6143	
	배유진	청렴역량 심화 과정, 전문강사 양성과정, 보수교육 운영	043)901-6146	
	장보정	청렴교육 콘텐츠 기획, 개발	043)901-6131	
	성장미	권익구제 통합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21	
	이지수	행정심판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12	
	박경현	청렴윤리경영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53	
	전현교	사이버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47	